

북한 인권상황을 ICC에 회부하기로 한 유엔결의를 환영하며,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드디어 오늘 19일(현지시간 18일) 제69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대로 북한의 인권침해가 최고위층 정책에 따라 자행되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이 같은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표차(찬성 111, 반대 19, 기권 55)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중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크게 환영할 일이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것은 2005년 이래 10년 연속이지만 사실상 북한의 최고 책임자를 ICC에 회부하는 내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이 같은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억류 미국인을 석방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제안하는 등 외교적인 총력전을 벌여왔고, 이에 앞서 대표적 북한 지지국인 쿠바는 'ICC 회부' 조항을 뺀 수정안을 냈으나 모두 무위에 그쳤다.

앞으로 중국 등의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결의안대로 북한 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할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유엔 총회 결의는 전 세계 유엔 회원국의 의사표명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적 구속력은 무시할 수 없다. 이제 우리의 주요 과제는 하루 속히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일이다.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에 이미 제정한 북한인권법이 정작 당사자인 우리나라에서만 2005년 8월 11일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발의한 이래 10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통일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속초시의회가 지방의회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10월 27일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지난 18일 김진기 의장과 신선익 의원이 우리 '한변'이 주최하고,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국회 앞에서 주관하는 '화요집회'에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속초시의회에서 위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신선익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다. 신 의원은 북한주민에게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강조하였다. 국회,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새겨들을 말이다. 국회는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11월 19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 태 훈